문제점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304

다운계약서 꼼수, 편법

다운 계약서 등 등장한 각종 편법에 '골머리'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등장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242대로 이중 판매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집계됐다.

그 중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판매가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62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들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했다.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A 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에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의 실제 차량가는 2억4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 법인은 다운 계약서를 통해 구매가를 낮게 신고해 2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물론 연두색 번호판 부착도 피할 수있었다.

이는 현재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실시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 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된다. 다운 계약서가 만연하자 수입차 업체가 법인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차대 번호를 조작, 할인 판매의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차량 등록시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 법인 명의로 변경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것이다.

법적 허점 효과 미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필수 교수는 "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했을 때 이미 이와 같은 편법은 예견됐다"며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낭비되는 세금은 물론 근본 적으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는 효과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필수 교수는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비싼 법인차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는 제도는 법인차를 제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주홍글씨와 같은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고차로 구입 가능해 실효성 지적도

올해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가 급감한 배경으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지목됐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S리포트] 연두색 번호판? 피하면 그만

[법인차, '편의' 아닌 '특혜' 논란]③ 취득가액 기준 허점 드러나...기간 및 가격 설정 변경 '꼼수' 등장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52410400221996

법인차 규제, 가격보단 용도 초점 맞춰야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52410400231613

정부는 이미 모든 법인차가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차에 대해 일반차와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 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저가 차종은 회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과시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차 가격을 규정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법인차 기준 가격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수입차업체들이 FTA 형평성 등을 들먹이면서 반발한다"며 "8000만원 이상 법인차가 줄더라도 7900만원짜리 법인차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번호판을 만들고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선 세금을 비롯한 많은 재원이 쓰이는데 법인차 혜택을 유지하면서 번호판만 추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이 특권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효과도 생겼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밀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선집중 '연두색 번호판' 비중 뚝, 벌써 꼼수?

수입 법인차 비중 첫 30% 밑돌아...'취득가 낮춰 거짓 신고' 제도 보완 필요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35872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편법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일선 판매 가격과 등록 가격을 비교해서 찾아내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올들어 2월까지 취득가가 7천에서 8천만 원 사이로 등록된 수입 법인차 1,110대 중 실제 가격이 8천만 원 넘는 차량이 912대에 달합니다. 상당수가 다운계약서가 의심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

news_id=N100761229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09517563?OutUrl=naver

◆법인차 번호판 '황당 꼼수'

고가의 수입차이지만 '연두색 번호판'를 부착하지 않는 '꼼수 법인차'도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다운계약'으로 기준금액인 8000만원 초과 차량의 금액을 계약서에는 낮춰 작성하고 차액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 간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1월 2660대, 2월 310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047대)보다 18%가량 줄었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8000만 원에 약간 못 미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7000만~8000

하지만 취득가액이 8000만 원에 약간 못 미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7000만~8000만 원 사이 수입 법인차들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법인차 표시 효과가 있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 원 미만 차량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인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 가격이 8000만원이 넘어도 할 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꾸미면 8000만원 미만에 구입한 것으로 된다.

전용번호판 부착 안하려고 단기 렌트?...국토부 "1년 이상 빌리면 부착해야" 법인차 전용번호판 대상차량 국세청과 주기적 공유, 세금탈루 관리

https://www.samili.com/samilinews/ContentSer.asp?

idx_no=44101&gubun=&searchword=#:~:text=%EC%A0%95%EB%B6%8 0%EB%8A%94%20%EC%A7%80%EB%82%9C%201%EC%9B%94,%EB %A0%8C%ED%8A%B8)%EC%B0%A8%EB%9F%89%2C%20%EA%B4% 80%EC%9A%A9%EC%B0%A8%EB%8B%A4.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대해 단기계약을 했더라도 같은 차량을 1년 이상 빌렸다면 전용 번호 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강제했다. 대상 차량은 8천만원 이상의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차량, 관용차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1년 미만 단기계약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대상 이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인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등록 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금탈루 등 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장기 렌터카로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천64대 규모다.